

보도해명자료 (’17. 1. 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금융 논리로 구조조정 망쳤다고?’ (’17.1.11, 서울신문)

1. 기사내용

- 해운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논리만 앞세운 금융위원장이 문제라면, 한진해운 회생 및 산업논리를 강변 못한 산업부·해수부 장관도 문제이며, 치열한 토론과 종합 판단을 끌어내지 못한 부총리 또한 문제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해운산업 주무 관청인 해수부와 금융위 등이 논의를 거쳐 원칙과 방향을 마련한 후 추진

* 해운산업은 정부조직법상 해양수산부의 업무

-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(’16.8.31)하기 전에 산업부는 금융당국이나 해수부로부터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된 공식적인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바 없었음

- 산업부는 수출 중소·중견기업 화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송 차질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고, 관련 상황의 모니터링은 물론 필요한 대책을 마련·추진하였음

-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‘수출물류애로 비상대응반’을 즉각(9.1일) 가동하여 애로접수 및 지원체계를 운영한 바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창·의산업정책과 최우석 과 장 (044-203-4360)
조선해양플랜트과 강감찬 과 장 (044-203-4330)
무역정책과 노건기 과 장 (044-203-4020)